

“디지털 대통령이 되겠다”

— 민주당 노무현 후보 —



▲ 민주당 노무현 후보

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정보기술(IT)정책 비전과 공약을 듣는 ‘2002 대선후보 초청 IT정책 포럼’이 열렸다. 이 행사는 본 협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, 한국CIO포럼, 한국인터넷기업협회, 전경련정보통신위원회 등 9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행사다.

첫날인 12일엔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나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패널리스트들과 토론을 벌였다. 이날 노 후보가 발표한 정견과 패널 토론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.

“디지털 대통령이 되겠다”

노 후보는 이날 “디지털 대통령이 되겠다”고 선언했다. 그는 디지털 대통령의 임무로 IT와 정치를 결합한 ‘대한민국 업무재설계’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. 정보화를 접목한 국가 경영 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식정보사회를 완성하겠다는 것. 노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 ‘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’과의 인연을 들어 자신이야말로 “21세기 지식정보시대가 만든 유일한 대통령후보이며 가장 강력한 디지털 마인드를 지닌 대통령감”이라고 강조했다.

IT전문인력 100만 양성

노 후보는 현 정부의 IT정책에 대해 “기초는 잘 다졌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다”고 평가했다. 인터넷 대중화와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핵심기술, 콘텐츠, 전통산업의 정보화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렸다. 그는 또 인터넷에 한글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을 들어 “고속도로를 잘 지어 놓고도 실어 나를 짐이 없다면 문제”라며 “지식정보사회 진입을 위해 공공 부문 데이터베이스(DB)를 비롯해 학술 및 문화산업 분야 DB 확충이 절실

하다”고 주장했다.

노 후보가 발표한 IT공약 핵심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(R&D) 강화로 요약됐다. IT인력 양성은 앞으로 10년간 100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00개 분야에서 100명씩 정예인력 1만명을 육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. 기초과학과 IT분야의 R&D 투자는 현행 4.7% 수준에서 7% 수준으로 높이고 100개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. 그는 “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산업단지도 집중 육성하겠다”고 덧붙였다. 한편,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,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를 둘러싼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“당선되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”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.

투자 위험 줄일 장치 강구

노 후보는 벤처정책에 대해 “벤처는 위험해도 전망이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되 벤처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겠다”고 밝혔다.

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직접적인 방식은 피하고 인재 양성이나 교육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. 또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확립해 합리적인 평가에 기초해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.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“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실물경제의 뒷받침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겠다”고 밝혔다.



▲ 협회 장흥순 회장이 노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